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지난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일성 死後 북한체제의 變化와 政策方向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自由化, 福祉化, 開放化라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종합적인 통일정책추진의 構想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美-北韓간의 접촉이 진행중인 현재의 시점에서 핵문제해결 以後 예상되는 북한체제의 변화내용은 향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당 연구원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향후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고자 “김일성 死後 북한의 政策方向과 우리의 統一方案”이라는 주제로 제13회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회의의 발표논문들과 토론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인데, 일부논문은 저자가 토론내용을 감안하여 보완하였으며 토론내용도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의 통일방안 개발과 통일연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994. 10.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

— 目 次 —

序 文

開 會 辭	李秉龍 ...	1
I. 會 議		3
1. 金正日 政權의 出帆과 對內外 政策展望	金炳魯 ...	5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우리의 對北政策	朴鍾喆 ...	48
II. 綜合討論		77
〈附錄〉 會議日程		118

開 會 辭

지난 7월 8일 金日成의 돌연한 사망으로 金正日의 권력승계 및 신정부의 政策方向이 최대의 關心事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權力構造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局面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流動的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伸張된 국력을 바탕으로 自由化·福祉化·開放化라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여 自由民主主義 이념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未來指向的인 입장에서 綜合的인 統一政策推進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統一方案에 입각하여 統一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統一環境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향후 북한 新政權의 政策方向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金正日 政權의 공식적인 出帆遲延은 북한내부의 권력구조 변화폭과 對內外 政策方向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周邊4強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도 南北關係에 不確實性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북·미 3단계회담 이후 核問題를 포함한 包括的 關係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軍事停戰委撤收, 일본 및 러시아의 對北 關係改善 노력 등은 急變하는 統一環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우리의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主導的·能動的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綜合的인 對應策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저희 연구원은 金正日 체제하에서의 北韓의 變化可能性 및 政策方向을 전망하고 우리의 통일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對北政策 추진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意見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支持基盤을 확산시키고자 『金日成 死後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이라는 주제로 國內學術會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北韓에 대한 深層分析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有益한 토론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4. 9. 16

民族統一研究院

院 長 李秉龍

I. 會 議

빈 면

金正日 政權의 出帆과 對內外 政策展望

金 炳 魯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김정일의 정세인식 |
| II. 북한의 정책기조와 정책변화 | V.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전망 |
| III. 김정일 정권의 당면 과제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해방 이후 49년 동안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절대권력을 행사 해온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체제는 물론 한반도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반세기 동안 북한체제를 지탱해 왔던 신적 카리스마의 소멸로 북한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김일성이 남긴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신정권은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탈냉전의 국제적 상황은 북한 신정권으로 하여금 과거의 폐쇄적 공간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사회주의권의 와해와 탈냉전 구도로 급속히 변화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경제의 구조적 한계상황에 부딪혔으며 핵사찰을 둘러싼 국제적 고립과 군사적 위기감은 유래없는 체제붕괴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다. 북한은 특히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체제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반도 내의 국제적 역학관계가 남북관계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대미관계 개선 및 경제적 지원에 심대한 장애가 있음을 직시하여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추진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으나 북한 신정권은 이 기회를 체제유지와 정권안정의 돌파구로 삼고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죽음과 북한 신정권의 출범은 탈냉전 시대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통일시대의 새장을 예고하는 상징적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 통일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신정권에 대한 접근의 발걸음을 매우 빠르게 내딛고 있다. 더욱이 한국전쟁 이후 40여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고 핵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지속했던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2년 동안 끌어왔던 핵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방향에서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미협상에서 핵동결 카드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북한은 외교대표부 개설,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공급 등 핵문

제 해결을 위한 굵직한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경제난을 해결하고 체제유지에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매듭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동결 및 핵안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대화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협의·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과연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 것인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은 아직 공식 출범을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권력장악에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정치적 차원에서 공식출범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대주민 정치력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전개해 왔다.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제와 방향은 이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향후 김정일 정권이 추진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 발전과정에 비추어 북한의 정책기조와 변화 내용을 검토한 후,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정권의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김정일의 정세인식과 북한의 기본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분야별 정책의 전개과정과 해결전망에 대해 분석·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정책기조와 정책변화

1. 정책기조

사회체제(social system)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4부문(혹은 하위체계)으로 구분¹⁾해 볼 수 있으며, 체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치체제는 체제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정책수행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²⁾ 정치체제는 국내외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전체의 목표달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체제 내적·외적 요구와 지지를 받는 한편, 그러한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제공해 주어야 한다.³⁾

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도자 개인, 당 혹은 당 정협의체, 그리고 관료·국가조직의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구조는 김정일의 권력부상과 긴밀하게 얽혀 변해왔던 바, 당 중심에서 당정협의체를 거쳐 국가행정체제

1) Irving L. Horowitz 교수는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의 발전과정에서 군사력발전과 군부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분석에서 군사부문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I. Horowitz, *Three Worlds of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Cuban Communism* (7th edi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89).

2)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pp. 126~127.

3)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 66.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⁴⁾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정무원·노동당을 비롯하여 정책결정 핵심부에 전문기술관료들이 대거 등장하였다.⁵⁾ 따라서 실제적인 정책추진의 주체입장에서 보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정책의지와 당·행정분야 실무진의 정책능력 평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발생근원⁶⁾이 그러했듯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띠으로써 폐쇄적 사회체제를 형성하였다. 사회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반자본가 계급의 혁명으로 태동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부 피지배계급의 반제국주의 혁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포위, 경제봉쇄, 군사적 압력과 같은 국제환경에 직면하였던 것이다.⁷⁾ 이러한 이유로 소련의 경우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체제도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까지는 고립된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하여 전시공산주의 체제 및 자급자족을 기본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 장달중,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1993. 6), pp. 3~23.

5) 양성철, “북한의 권력이동,” 「북방저널」 (1992.5), p. 52. 혁명 2세대 전문관료가 정무원·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의 50%, 후보위원의 70%, 비서국은 10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7)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p. 121; 서재진 외, 「사회주의체제 개혁 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24에서 재인용.

8) G. Arbatov and W. Oltmans, *The Soviet Viewpoint* (London: Zed Books, 1983), p. 62.

북한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대회를 통하여 사상에서의 주체를 선언하고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천명하였으며, 뒤이어 1957년 12월에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1962년 12월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각각 체제의 정책목표로 내세움으로써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였다.⁹⁾ 이는 마침내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북한의 정부정강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¹⁰⁾ 즉 정치적 자주성, 자립적 민족경제, 국방에서의 자위력을 구축한다는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공화국 10대정강」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도표 1〉 북한체제의 분야별 정책기조

	정치분야	비정치분야
상부구조 유일체계확립	정치·외교 자 주	사회문화 주체사상
토 대 경제-국방병진노선	군 사 자 위	경 제 자 립

북한은 특히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병진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의 핵심으로서 중공

9) 김갑철,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1988), p. 79~86.

10)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481~548.

업발전을 심도있게 추진해 왔다.¹¹⁾ 더욱이 남북분단 및 한국전쟁의 막대한 피해를 겪은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남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경제정책을 군사적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전략으로 전쟁유사시 보급로가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각 지방별, 특히 군단위로 자급체제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각 공장마다 반드시 군수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였고, 공중폭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전시경제체제, 지역별 자위국방체제를 갖춘 것이다. 국방을 강조하는 북한의 의지는 해마다 GNP의 최저 12% 내지 최고 25%까지를 지하군사시설등 국방부문에 투자에 왔다는 사실과 인구가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백만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정치체제는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체제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은 1967년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을 시도하여 1974년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수령의 신격화와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주민통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북한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통합의 이념은 유일적 정치체제를 지탱하는 정치이념화되어 있다. 유일체제는 특히 전살자·피살자 등 한국전쟁의

11) 북한체제의 발전과정은 자립경제와 자위국방을 두 축으로 한 '주체모델'로 분석할 수 있다.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모델의 비교(II),” 「북한연구」 제3권 제2호 (1992 여름).

결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핵심세력으로 사회계층화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했던 것이다.¹²⁾ 1986년에는 수령론에 입각하여 수령·당·대중을 유일지도체계에 연결시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결정은 주체사상, 자주외교, 자립경제, 자위국방 및 경제-국방병진노선, 유일체제 등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1980년대 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변화를 가져왔다.

2. 체제발전과 경제정책의 변화

북한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변화의 필요성은 체제의 토대인 경제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통제경제는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대중동원전략에 힘입어 성장을 가져오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불균형, 국

12) 북한 공식인구 자료는 1949년과 1953년 사이에 약 113만 가량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 C.: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52. 그러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제 인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전쟁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존 헬러데이(Jon Halliday)는 전쟁으로 북한사람이 최소한 250만(민간인 200만, 군인 50만)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0.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여기에 부상자 182만을 포함하면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약 50%의 결손가족을 발생시켰다.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등 사회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방분야의 비대 및 동기부여의 부재 등 많은 비효율적인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¹³⁾ 북한의 경우도 1950년대까지는 토지개혁과 국유화 조치, 천리마운동과 같은 대중운동 등에 힘입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들어 사회주의 계획경제·통제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등의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1970년대에는 외자도입정책¹⁴⁾ 및 「3대혁명」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구조적 불균형 및 동기유발부재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의 80% 이상을 중공업에 할당해 왔고 피해망상적인 전시경제체제의 구축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었다. 그 결과 기본소비재와 생필품의 절대부족현상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부족, 무역구조의 폐쇄성 및 동기유발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정책지도부는 1984년 1월 강성산을 총리로 기용하고 제한적 개혁·개방¹⁵⁾을 단행하였다. 이는 중공업 위주

13) 정상훈, “경제계획과 성과,” 김준엽·스칼라피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범문사, 1987), pp. 158~159; 서재진 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사례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23~32.

14) 이 정책은 중동요일쇼크, 가뭄, 무역구조의 폐쇄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1976년부터 유럽국가들로부터 지불정지(default) 선고를 받고 채무불이행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15) 개혁이란 경제부문에서의 국가중심적이고 불균형적인 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 즉 국가통제의 경제영역을 해제하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위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방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통제, 자본주의권과의 무역교류 기피 등 폐쇄성에서 벗어나 정보접촉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개방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허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과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공업 및 생활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공업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대내적으로 1984년 8월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일으키고 터밭과 「장마당」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의 구역과 읍, 농촌의 군단위에 각각 1개씩 200여개 이상의 「직매점」이 설치되었고, 해마다 이를 위한 공장과 작업반이 1천 5백여 이상씩 늘어났다.¹⁶⁾ 또한 국영기업소에서의 독립채산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결정¹⁷⁾하고 이듬해 추진한 연합기업소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對外的으로는 외채의 위험부담 없이 동구 사회주의권과 서방권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合營法을 채택하는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의 대외개방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대외경제협력 대상으로 사회주의 제국과 제3세계 이외에 북한에 우호적인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증진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⁸⁾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한 후, 1985년과 1986년에 합영법의 시행세칙이 마련되었으며, 1986년 8월에

16) H. S.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28, No. 12 (December 1988), p. 126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p. 176.

17) 1984년 당에서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었으며 이를 전산업부문에 확대·실시하는 지침을 김일성이 하달하였다. 김일성,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무원 상무회의에서 한 연설, 1984년 11월 13일),”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46~362.

18) 「로동신문」, 1984.1.27. 김일성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14~231. 1984년 6월과 7월 김일성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 방문후 무역확대의 필요성이 재천명되었다. 「로동신문」, 1984.7.10.

는 합영총국이, 1988년 11월에는 합영공업부(1990년 폐지)가 각각 설치되었다.

한편,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중공업발전의 장애요인이었던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에너지 분야의 만성적 침체로 인해 경제-군사발전의 위기¹⁹⁾를 맞이하였으며 1986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5MW 핵원자로를 가동하였다.²⁰⁾ 북한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근모를 총리로 기용하고 원자력공업부를 신설하는 등 원자력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²¹⁾

3. 사회주의권 붕괴와 대외·대남정책의 변화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군사적 위기마저 고조되자 대외·대남정책에서 유화적 조치를 서둘러 취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신국제질서 전략과 마찰을 빚음으로써 군사적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냉전 체제의 와해로 세계는 경제적, 군사적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구함

19)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침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군사부문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체제지속이 문제시된다. W. Brus and K.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34.

20) 북한은 1974년에 IAEA에 가입하였고 1985년 12월 소련의 요구로 NPT에 가입하였다. 김일성은 1976년에 원자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김일성저작집 31」, p. 474)한 바 있으며, 1995년에 50MW원자로를, 1996년에 200MW원자로를 각각 완공할 예정에 있었다.

21) 이같은 북한의 핵활동은 미국의 주목을 받았으며 1988년 12월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북한은 김용순을 1988년 12월 당국제부장에 임명하고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1988년 12월부터 1993년 5월 말 북미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총 33회의 북경 참사관급 접촉을 가졌다.

으로써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를 유지시키며,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대결구도의 심화와 일본의 핵무장 촉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을 유발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아·태정책에 부담을 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체결, 미사일의 중동수출금지, 미군유해송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보장 및 미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 북미관계 개선 등의 주장으로 팽팽한 대결을 지속하였던 것이다.²²⁾

이러한 북한의 강경태도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가시화(1990.8)되고 한소수교(1990.9.30)로 국제적·군사적 고립이 가중되자 대외·대남정책에 유연한 태도로 전환하였다. 특히 1991년 1월 걸프전쟁의 발발로 북한은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엔가입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전환을 단행하였다.

대외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북한의 유엔단독가입이다. 북한은 그동안 고수해 왔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독립의식으로 UN에 가입하였다. 걸프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실제적인 대이라크 군사공격과, 그 해 4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예방 폭격론’이 「120일 시나리오」로 구체화된 사실이 드러나자 북한은 전쟁발발을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대외정책의 전환을 추진한 것

22) 김병로, “북미회담 이후의 남북한관계 전망,” 「사회과학」 제32권 2호 (1993), pp. 243~244.

으로 보인다.²³⁾ 북한은 UN에 가입함으로써 군사적 지원이 불가능한 중국과 소련의 ‘표’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1990년 5월 24일 소위 ‘단계적 군축안’을 제시한 북한은 1991년 4월 단계적 철수의 첫단계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군철수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다.²⁴⁾ 또한 그동안 식민통치의 주범으로 적대시해 온 일본과 식민지배상문제 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다. 1990년 9월 28일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의 3당간에 「조일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북한과 일본은 1991년 1월 말 평양에서 제1차 회담(1991.1.30~31)을 시작하여 1992년 11월 핵문제로 중단되기까지 8차 회담을 진행하였다.

대남정책에서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 1991년 5월 3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 남북한 정부가 각각 외교와 군사권을 관할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전쟁발발시 남한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차단하기 위해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북한이 「남북합의서」에서 「불가침조약」에 비중을 두

23) 1991년 2월 27일만해도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에서 남북한이 반드시 협의하고 합의할 때만 UN동시가입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을 그해 5월 27일에는 이를 완전히 번복하고 “선택이 없어(Has no alternative)” 동시가입을 시도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하였다. 「AP통신」, 1991. 5. 27; 이기택, “분단구조의 변화와 민족통합의 제문제,”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1991), p. 24에서 재인용.

24) 1993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실천의 4가지 조건에서는 미군철수에 대한 ‘의지’만 표시해도 만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4~7)에서 '하나의 조선' 정책을 내세워 상호체제인정 및 교류·협력에 반대하였던 북한은 1990년 12월 11~14일의 3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 채택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⁵⁾

북한의 이러한 대외·대남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걸프전쟁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⁶⁾ 첫째는, 미 군사력이 이라크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사담후세인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력을 가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걸프전 당시 전쟁을 불사할만큼 매우 강경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미·대남접근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북한체제의 특성을 살펴볼 때 북한은 각 분야별 정책기조는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구조의 문제점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세부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북한은 1993년 말을 고비로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최근 악화된 국내외 상황이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고, 향후 3년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정하여 축적된 과제를 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25) 통일원, 「통일백서 1992」(서울: 통일원, 1992), p. 151.

26) Martin Bradley, "Intruding on the Hermit: Glimpses of North Korea," *East-West Center Special Reports* (Hawaii), Number 1 (July 1993), p. 23.

III. 김정일 정권의 당면과제

1. 경제난 해결

현재 김정일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경제난 해결을 통해 체제를 공고화하고 김정일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²⁷⁾을 계속하였으며 1991년에는 사회주의권 붕괴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과 수입 등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북한은 1991년부터 원유, 석탄 및 식량수입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특히 1991년 1월부터 북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소련이 지금까지의 구상무역을 거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원유수입이 10분의 1로 격감²⁸⁾되었고 1993년에는 1990년에 비해 5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²⁹⁾ 대외교역은 1990년에 비해 1993년에는 53%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외채규모도 1990년의 78.6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약 30%가 증가한 103.2억 달러로 늘어났다.

합영사업도 부진하여 합영법 시행 이후 1992년 7월까지 외국인

27)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8) Chong-Sik Lee, "Prospect for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co-hos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ay 27~28, 1994, Seoul, Korea), pp. 7, 8, 10.

29)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1994.8.17), p. 8. 이른바 '선행부문'의 발전이 시급함은 그 후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채취공업과 전력산업의 침체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장종록, "선행부문의 빠른 발전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 「경제연구」 제1호(1991), p. 3; 「로동신문」, 1992.5.16.

업과 140여건의 북한내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업중인 66건 중에는 일본(조총련기업)과의 합영이 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³⁰⁾ 총투자액도 1억 달러 정도로 규모도 매우 작다.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도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올렸을 뿐, 원료조달의 한계와 정부의 가격통제, 게다가 여가이용의 제한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소위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한 근본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대중동원의 한 수단에 머물러 있다. 독립채산제 역시 효율성제고라는 원래의 목표와는 달리 낭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략하였다.³¹⁾ 터발과 농민시장 활성화의 경우 곡물류와 공산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고 채소류와 가내수공업제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격도 제한되어 있어서 불법거래 및 암거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경제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촉진된 주민의 의식변화, 소득의 이중구조 형성, 부정부패, 암거래, 매춘 등 사회적 부작용 및 사회분화 현상을 통제하는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물질생활 향상과 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인민소비품 생산공장과 가내작업반 등 개인부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자본주의적 병폐'가 발생하였다. 또한 엄격한 주민통제에도

30) 「한겨레신문」, 1992.10.3.

3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59; 주용설, “기업관리의 합리화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근로자」 (1991.9), p. 70; 리경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1991.8), pp. 59~64.

불구하고 합영법 시행 이후 무역업자와 방북교포의 왕래가 잦아지고 여기에 유학생, 외교관 등을 포함한 외국경험자들로부터 서방문물 및 정보가 유입되고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소식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북한은 생활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92년 3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단행하였다.³²⁾ 최근들어 전력 및 석탄생산 등 광공업이 부진하였고 석유수입도 감소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폭적인 임금인상조치를 취하고 주택과 같은 비생산적인 건설부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만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통제된 개방정책, 즉 경제특구를 시도한 것이다.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³³⁾로 지정하는 한편 1992년 헌법개정(37조개정, 1992.4.9), 외국인기업법·투자법·합작법(1992.10.5), 합영법 시행세칙 개정(1992.10.16) 등을 마련

32) 「로동신문」, 1992. 2. 14. 북한은 1992년 3월 1일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43.4% 정도 인상하였으며 연금은 평균 50.7%, 학생들의 장학금은 33%를 인상하였다.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도 비 26.2%, 강냉이 44.8% 등 전반적인 임금인상조치를 단행하였다.

33) 계획의 주요내용은 나진, 선봉, 청진등의 도시에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중국과 소련을 잇는 기존철도망과 도로를 정비·보완하며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동북아 경제협력과 수송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나진·선봉지대 및 청진항 개발을 위한 총투자규모는 69억 8,900만 달러로 사회간접자본부문과 공업부문에 절반 정도 씩 투자될 예정이다. 합영뿐만 아니라 100% 단독 외국출자 기업을 허용하고 창립 3년 후부터 지불하는 소득세율도 기존의 25%에서 10~15%로 인하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하였다. 1993년부터는 1992년 12월 총리에 오른 강성산³⁴⁾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토지임대법(1993.10.27), 외국인투자은행법·출입국관리규정(1993.12.10), 합영법전문개정(1994.1.20), 외국기업상주대표부규정·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1994.2), 자유무역항규정(1994.4.28),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1994.5) 등 대외 개방과 관련된 각종 법규의 세척을 제정하였다.

이같은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1993년 12월 당 제6기 21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 및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으로 결정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실현이 직접적인 경제과제라 할 수 있다.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경공업과 전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³⁵⁾ 폐쇄적인 무역구조로 겪는 만성적인 외화부족 현상을 타파하고 수출을 늘려 대외지불능력³⁶⁾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진·선봉지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식량난·에너지난의 지속, 생필품부족의 만연,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외채증가 및 무역의 악화상태 지속 등과 같은 전반적

34) 이는 1984년 합영법 및 신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강성산을 등용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35)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1991.4), p. 71.

36)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1989.2), p. 61.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체제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심각해져가는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특구활성화 및 농업·경공업·무역발전 등 3대제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의 사상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권안정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 핵문제 해결 및 대미관계개선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1월 22일³⁷⁾ 미국과 고위급접촉을 시작한 이래 NPT탈퇴(1993.3.12), 북미고위급 1,2단계회담(1993.6~7), IAEA탈퇴(1994.6.13), 및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1994.6.15) 등으로 이어지는 타협과 강경노선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핵동결을 제시(1994.6.17),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회답(1994.6.22)을 받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92년 1월의 대미접촉에서 핵안전협정 서명계획을 밝히고 양국관계 개선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대미 관계개선의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1992년 핵안전협정

37) 아놀드 켄터(Arnold Kanter)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북한의 김용순 당시 노동당 국제부장간의 접촉에서 미국측은 남한으로부터 핵무기철수 완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Arnold Kanter,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and U.S. Policy: Collective Engagement in a New Era,"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증언, February 6, 1992, pp. 13~15.

에 서명한 이후에는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³⁸⁾ 하여 1993년 6월과 7월 제1, 2단계 북미회담을 진행하였다.

그후 제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오다가 1993년 10월 애커먼, 퀴노네스, 강석주, 허종을 통해 제시된 「일괄타결안」은 그해 11월 미국측의 「포괄적 해결안」으로 정리됨으로써 북한은 1994년 2월 IAEA에 7개 신고시설 사찰수용의사를 통보했고, IAEA는 3월과 5월 북한내 핵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핵연료봉 처리문제 협상에 실패하여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 및 북한의 IAEA 탈퇴의사 표명(1994.6.30) 등 다시 강경대결 국면으로 접어들던 와중에서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1994.6.15~18)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대북한 제재논의를 주도해온 미국은 중국의 부정적 자세와 러시아의 유보적 입장으로 인하여 대북 경제제재가 유엔 내에서 단기간에 합의·이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노력을 재개하였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쟁불사의 강경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사실상 국제적 제재를 피하려는 입장에서 카터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측에 핵무기 개발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8월 5일 고위급 3단계 1차회담을 재개하여 4개항의 합의성명(1994.8.13)을 발표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38) Spurgeon M. Keeny, Jr.,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Nuclear Renegade or Regional Partner?," *Arms Control Today* (May 1993), p. 3.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즉 북한과 미국은 2천MW급 경수로 지원, 흑연감속로 건설동결 및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양국수도에 외교대표부 설치 및 무역투자 장벽 완화, 미국의 핵위협 배제 및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성명 이행, 북한의 NPT잔류 및 핵 안전협정 이행 등에 합의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김정일 정권은 핵동결 및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도 김정일 정권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북미관계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4개 분야의 전문가회의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고위급 3단계 2차회담에서 세부사항들을 합의·실천함으로써 정권의 대내외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IV. 김정일의 정세인식

1. 개혁·개방의 부작용 인식

1983년 6월 중국방문을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상황을 견학하고 돌아온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만성적인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 2월 의식주 문제해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소위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제도화 작업을 추

진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소폭의 개혁·개방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명백히 인식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 속에서 계급적 각성이 무디어지고 생활상 교우가 더 높아진 반면에 혁명적 세력이 부족한 새세대들이 간부대열에 들어오면서 관료주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사회주의 건설의 첫시기에 얼마 없었던 부정부패 현상까지 적지않게 나타나게 되었다.”³⁹⁾

김정일은 동독,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원인이 바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임을 뚜렷이 인식한 것이다. 즉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원인을 관료주의의 팽배,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 지식인과 청소년들의 사상오염 등 세가지로 결론짓고 사상통제와 단속을 강화하였다.⁴⁰⁾ 그래서 1984년 개혁정책과 함께 한 달에 한번으로 느슨하게 풀어 놓았던 학습활동과 생활총화를 1991년부터 다시 일주일 단위로 환원하는 한편,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사회문제가 된 암거래, 매춘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 타파를 위한 ‘그루빠’」를 조직하여 1991년 12월부터 1993년 말까지 부정부패 척결 등 사상무장을 강화하였다.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통제된 개방정책, 즉 나진·선봉지역 경

39)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년 10월 10일 당창건 47주년 기념 논문),” 「로동신문」, 1992.11.2.

40)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2.11.2.

제특구 구상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특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방문제에 대한 인식

김정일은 1964년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서 경제, 특히 郡경제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군을 거점으로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쟁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사시에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군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들의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⁴¹⁾

1984년에도 김정일은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⁴²⁾라고 하여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정일의 군사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새로운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즉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배경이 약화된 시점에서 김정일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41)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 (1985.3), p. 11. 이는 김일성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8.8)”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43~251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이며, 1964년 「농촌테제」에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28~237.

42)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

판단하고 핵개발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⁴³⁾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 체제를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체제의 토대인 경제·군사부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쇠퇴, 고르바초프의 대북 경제 군사원조 중단 선언과 소연방 해체 등 일련의 사태들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감과 군사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로써 군사부문에서 새로운 전략의 시도가 불가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핵개발계획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보상과 경수로 지원에서 철저히 ‘단계적인 핵투명성 보장’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남관계에 대한 인식

김정일은 경제침체의 요인으로 사회주의권 시장 붕괴와 국방력 강화 등을 들어 합리화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형을 통해 체제경쟁의 정당화를 시도하였다. 1984년만 해도 김정일은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조선을 압도하고 완

43) 북한이 핵에너지를 핵무기개발로 전용한 시기는 대체로 1989년 혹은 1990년의 어느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Alexandre Y. Mansourov, “North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paper presented at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Berkeley, California, May 1994), p. 1.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紙가 보도(「조선일보」, 1994.6.16)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은 1990년 9월 한소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6년 가동한 5MW 원자로에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도(*New York Times*, April 16, 1992)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0년대부터 40여년간에 걸친 소련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그리고 현재 3천명의 원자력관련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金珉奭·金泰宇·全炳玩, “北韓의 核武器開發 實狀과 底意,” 「統一問題研究」 제3권 4호 (1991 겨울), pp. 131~142.

전히 눌러 놓아야 한다”고 체제의 경제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⁴⁴⁾ 김정일은 그의 교시에서 체제경쟁의 부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즉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⁴⁵⁾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정치군사전과 경제전⁴⁶⁾이 불가능해지자 체제의 정당성을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제경쟁 대신 무상교육·무상치료, 무세금·무실업 등의 내용을 체제의 우월성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마약·매춘 등의 도덕적 문제를 들어 남한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화의 시도는 흥미롭게도 북한의 역사적·사회적 경험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억압이라는 제3세계의 보편적 경험에 입각하여 경제성장 보다는 사회적 평등의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⁷⁾

44) 김일성도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라며 경제효율성 보다는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한 바 있다.

45)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1.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51.

46) 김정일은 1984년 2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남북간의 경쟁을 ‘정치군사전인 동시에 경제전’이라고 하였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p. 2.

47)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9월 출간예정). 귀순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 제도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북한사람은 약 30~40%로 많지 않지만 사회주의 제도가 완전고용·자립적 민족경제 등 소위 ‘사회적 우월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70%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정치군사전과 경제전의 체제경쟁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내세워 체제공존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민족주의적 선전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통일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V.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전망

김정일의 정세인식에 근거해 볼 때,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내정책에서는 개혁은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 경제개혁을 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한다는 정책슬로건을 사용할 것이다.⁴⁸⁾ 동시에 엘리트 구성에서도 기존의 노중청 배합원칙을 견지⁴⁹⁾함으로써 내적인 개혁정책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평화·친선의 공식 대외정책 이념을 강조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군사부문을 체제유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제2경제인 군경제를 민수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 협상에서도 확실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없는 한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8월 27일 김정일 로작

48)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이 발표한 추도사 참조. [조선중앙방송], 1994.7.20.

49) 김정일 로작(1974.8.2) 발표 20주년기념 보고대회에서 발표(1994.8.27)한 계승대의 보고. [조선중앙방송], 1994.8.27.

(1974.8.2) 발표 20주년기념 보고대회에서 계응태는 현 정세에 대해 “지금 우리혁명의 내외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며 우리가 갈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데서도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남정책에서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면적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한 통일달성 등을 천명⁵⁰⁾한 바와 같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할 것이며, 체제경쟁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심리전·사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의 기본 정책방향은 경제난 해소 및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왕에 추진해 오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대내정책: 유일체계의 지속과 경제특구의 확대

가. 김정일 유일지도체계의 지속

북한체제는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지도체계를 유지해 왔고 김정일을 수령으로 옹립하기 위한 이상화 및 제도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필연적으로 김정일 유일체제의 성격을 떨 수 밖

50)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이 발표(1994.7.20)한 추도사. [조선중앙방송], 1994.7.20.

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뇌수⁵¹⁾로서 인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는 것은 제도적 최고지위를 이양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주석, 당총비서 등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령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최고지위 획득 또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은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에 절차를 밟아 공식취임할 것이며 수령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령승계를 예상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김정일이 1973년부터 20년 동안 수령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1973년 당비서, 1974년 당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된 이후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명실공히 권력승계자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에는 사회 각 분야의 대주민 정책전개를 통하여 권력의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사회주의권 붕괴로 고조된 군사적 위기에 이를 이용하여 김정일을 군사부문의 최고지도자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⁵²⁾

51) 북한에서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고 “근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

52)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된데 이어, 1991년 12월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2년 4월에는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1993년 4월에는 마침내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일체의 무력을 총지휘·통솔하는 통치권을 확보하여 권력승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도 김정일의 수령승계를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당조직, 군부, 3대혁명소조 및 사로청 성원,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출신인 사,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⁵³⁾ 먼저, 당조직부 및 선전선동부 활동을 근간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한 김정일은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영남 등 당비서 및 정치국원들을 추종세력으로 갖고 있다. 둘째, 군부에서는 오진우, 최광 등 혁명1세대와 김정일의 배려로 최근 승진한 장군들이 지지기반이 된다. 군부의 지지기반은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됨으로써 제도적인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셋째, 1973년 발족된 이래 현재까지 배출된 약 4~8만의 3대혁명소조 성원들과 5백만의 사로청 성원들이 김정일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넷째,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출신 중 동기생인 오극렬, 김환(김혁아들) 및 동창생인 백학림, 김강환, 김두남 등이 김정일의 지지기반이다. 특히 당중앙군사위원은 총 15명 중 6명이 만경대학원 출신으로 김정일권력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김정일 정권은 유일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를 시도하고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김정일 측근의 충성과 및 친·인척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986년 5월 김일성의 후계승계에 대한 공식발언 이후

53) Pan Suk Kim, "Prospects for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l. 42, No. 3, p. 306; 허문영·정규섭·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등장과 정책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7), p. 4; 외교안보연구원, 「김정일체제의 등장과 정책방향 전망」(1994.7.27), pp. 5~7.

1987년 11월 항일 ‘구호나무’ 소개로 시작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은 1988년 2월 김정일花 재배·보급, 정일봉(1988.11.15), 향도봉(1991.1), 만수무강수(1991.2.9) 등 상징조작과 신격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또한 1988년에 기록영화 「위대한 전환의 한해 1974」를 제작·상영하여 김정일이 1974년에 이미 후계자로 추대되었음을 공개하고 1991년 개정·출판한 「조선로동당력사」에서는 1979년판에 없던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의 빛나는 해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라는 새로운 절을 삽입하여 수령승계의 정통성 창출을 시도하였다.⁵⁴⁾ 이미 과거의 행적을 재구성·선전함으로써 ‘문학예술의 천재,’ ‘사상이론의 거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는 이미지를 얻은 김정일에 대해 1990년대에는 ‘자주시대의 세련된 영도자,’ ‘광폭정치가,’ ‘인덕정치가’라는 이미지를 각색하였다.

김정일이 주석직을 이어받아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체계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데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⁵⁵⁾ 과거역사의 ‘신화화’와 같은 방식으로는 수령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즉 김정일의 카리스마 부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부진, 경제난 등으로 김정일유일체계의 지속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의 권위를 손상시

5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469~476.

55) 최근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김정일은 전체주민의 40~50%, 많게는 60~70%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9월 출판예정).

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일체제로의 변형도 상정해 볼 수 있다.⁵⁶⁾ 변형의 방법으로는 현재처럼 형식적으로는 김정일유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개인숭배 캠페인을 최소화하고 김정일의 절대권력을 점차 약화시켜 나가는 방법⁵⁷⁾과 현재의 헌법틀 안에서 집단지도체제⁵⁸⁾로 이행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의 유일체제가 지닌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의 수정에 대한 당위론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 입장에서 김정일 정권은 주석직을 포함한 제도적 수령승계는 물론 상징조작과 우상화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특구의 확대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는 물론 당면한 경제목표로 내걸고 있는 경공업제일주의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⁵⁹⁾ 북한은 특히 일본

56) 이종석, 「한겨레신문」 1994.7.19.

57)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7.30), p. 19.

58) 하와이 대학의 서대숙교수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바티트카첸코 부과장 등은 단기적 관점에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을 예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신동아 편집부, “해외전문가 종합진단: 김정일북한, 생존의 조건,” 「신동아」 (1994.9), pp. 215, 217.

59) 농업제일주의도 천명되어 농업부문의 개혁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농촌테제 30주년 기념에서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다. 현 상태에서 농업개혁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전인민적 소유’의 추진을 통해 식량생산이 증대되지 않고 농업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작업반 및 분조단위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개혁정책은 향후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식민지배상 및 경제지원을 받아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 및 확장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국토종합계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당면한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⁰⁾ 따라서 새로운 경제특구의 추가설치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1993년 3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125Km² 추가로 편입하여 총 746Km²로 확대한 바 있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시도한다면 장기계획과 더불어 보다 중·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필요하다. 새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신의주, 남포 등을 꼽을 수 있다.⁶¹⁾ 남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무역부는 대우그룹과 이미 1992년 2월 남포공업단지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경공업분야(의류, 봉제완구, 신발, 가방, 장식품)에 대한 남한의 합작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도 있어 남포지역을 경공업 중심의 무역지대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의주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입가공교역을 위해 무역지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통제된 관광산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60) 최근 1994년 8월 25일 나진·선봉지대에 자본금 1억루블 규모의 「조·조상업센터 주식회사」가 첫 합영기업으로 창설되었다. 여기에는 러시아 이외에 미국 스위스·오스트리아의 자본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외통신」, 1994.8.26.

61)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p. 84.

있다. 관광개발 사업은 소비주의와 같은 자본주의 사상이 침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가치기반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외화획득의 지름길이며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개혁·개방의 초기 중국이나 사회주의 경제개발에 완전히 실패한 탄자니아(Tanzania)⁶²⁾의 경우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외화를 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북한은 금강산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외화획득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남한의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미 홍콩의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⁶³⁾

2. 대외정책: 북미·북일국교정상화

가.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및 수교

북한과 미국간의 고위급 3단계 1차회담에서 제의된 4개분야를

62) James H. Weaver and Alexander Kronemer, "Tanzanian and African Socialism," *World Development* Vol. 9. No. 9/10 (1981), pp. 847. 탄자니아는 사회주의의 '폐쇄성' 자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킬리만자로(Kilimanjaro)산을 관광지로 이용하여 외화획득을 시도하였다.

63)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 84~85. 홍콩의 Raine Horne & Lau社는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으로부터 금강산관광개발을 위한 조사를 의뢰받아 금강산관광개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of Kumgangsán Tourist Development) 결과보고서를 1992년 5월 북한에 제출하였다.

중심으로 북미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9월 10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예정되어 있는 4개분야 전문가회담에서 외교대표부 설치, 경수로 선정 및 지원, 폐연료봉 처리문제, 원자로 가동중단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절차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3일 제네바회담에서 이를 공식선언할 것이며 합의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교대표부 개설문제는 폐연료봉 처리문제가 합의되고 북한이 연료봉의 재장착 중단 등 핵동결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서는대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5년 6월로 갱신되는 NPT체제에 북한을 잔류시키기 위해 외교대표부의 개설을 금년안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대표부는 연락사무소 수준일 것이며,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의 단계적 조치⁶⁴⁾를 고려해 볼 때,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대북 금수조치의 부분 또는 전면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공동합의는 연락사무소 개설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나면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NPT잔류 및 핵안전협정 이행문제, 그리고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 대미수교를 위한 협상의 발판으

64) 박종철,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 106~108.

로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를 일단소환함으로써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한 핵위협철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화협정 및 수교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으로서 북한을 경수로 건설 지원을 위해 북한을 적성교역국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수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북한은 ‘일괄타결’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강석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흑연감속로를 동결시키는 대신 “경수로를 받고 보상도 받는 것”이라며 “미국이 명백하고 확고한 경수로제공을 담보하고 우리가 경수로를 받을 때까지 흑연로동결에 대한 실천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따라 우리도 동결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나가자는 것”⁶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대체에너지가 제공되는데 따라 흑연로건설중단을 이행할 것이며, 경수로 지원 정도에 따라 방사화학실험실 봉인과 핵안전협정 및 한반도비핵화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천 MW급 경수로 건설은 향후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북한의 조치가 지연 또는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가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경수로 건설 지원과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일괄타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의 복잡성도 커질 것이다.

65) 「조선중앙방송」 1994.8.13.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개선의 주도권을 행사해 온 미국은 국내 정치와 외교분야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여 관계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3단계회담에서 특별사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북미 관계개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단서로 볼 수도 있다.

나. 북일 무역대표부 개설 및 수교

1994년 6월 29일 출범한 사회당출신의 무라야마내각은 북일수교에 대해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⁶⁶⁾ 야마시타 신타로 신임 주한일본대사는 1994년 8월 10일 북한이 핵의혹을 과거분까지 불식하지 않는 한 일본·북한간 수교는 안되겠지만 “핵의혹 해소가 양국간 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북한과 수교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쪽으로 갈 것임을 밝혔다.⁶⁷⁾

사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1990년 3당(북한의 노동당·일본의 자민당·사회당) 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의해 제동이 걸린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북미간 핵문제 해결 이후 이제 오히려 일본이 대미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 보인다.

66) 일본은 1993년 7월 친북성향의 사회당을 포함한 신보수 연합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기존 자민당정권보다 대북수교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8월 30일 북한과의 수교협상은 핵문제나 향후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일본의 전쟁책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67) 「동아일보」, 1994.8.11.

일본은 2차례의 북미회담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독주를 의식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1994년 2월 3단계 북미회담의 추진이 구체화되자 미국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보다 철저히, 강력하게 다루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북미 3단계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의 성실한 이행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대미압력행사와 북일수교를 통해 북한에 지지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수로 지원 등에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찰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실질적인 특별사찰을 거론하자 일본은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⁶⁸⁾하였으나, 한국형 경수로 선정을 찬성함으로써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방향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쪽으로 잡혔다고 보고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를 빨리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서는 북일관계개선의 움직임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정치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이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1972년 2월 미국과 상해커뮤니케를 발표함으로써 1969년부터 추진해온 양국관계개선을 공식선언하자, 일본은 곧이어 그해 9월 중국과의 「공동성명」을

68) 「동아일보」, 1994.8.29.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빠르게 증진시킨 사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⁶⁹⁾ 따라서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일본은 북한과 무역대표부 개설과 같은 관계개선을 곧바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⁷⁰⁾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의 전망이 더욱 밝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수로 지원시 러시아모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북한 내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입장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유지를 위해 북미회담의 성과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한 경수로 지원 및 양국수도에 외교대표부를 설치기로 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북일관계개선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대북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미 외교대표부 및 북일 무역대표부 개설은 경쟁

69) 그후 미국은 1973년 2월 키신저의 중국방문에서 양국수도에 '연락사무소'개설을 합의하였으며 1979년 12월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공식으로 수립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대만의 안보조약을 파기하였고 1천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 철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무기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다. 프랑소와 주아이요 쉐, 李昌訓 역, 「중국의 대외정책」(서울: 탐구당, 1989), pp. 114~115. 일본은 중국과 해저케이블설치 합의(1973.5), 항공협정(1974.4), 해상협정(1974.11), 어업협정(1975.8) 및 무역관계의 증진을 통해 1978년 8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70) 북한과 일본은 북경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비밀접촉(1994.8.23~25)을 시도하였다.

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핵투명성의 보장을 통한 관계증진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수교도 각각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대남정책: 형식적 남북대화의 재개

북한은 현재 핵문제 해결과 관련,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도 김정일 정권의 내부통합과 국제사회의 공인, 남한의 체제인정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북한으로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북미 국교 정상화에 두어져 있고 일본의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성사에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4.7.14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한다는 담화 발표 이후 대남비난공세를 노골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대미·대일 경제지원 및 수교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등 대남접촉을 재개해야 되는 바, 외형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히 체제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간에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체제공존의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대남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남북교류가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류 및 실천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

로 임할 것이다. 대신 「3대혁명전략」을 기본으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통일을 공세적으로 선전⁷¹⁾함으로써 체제공존을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남한체제의 내부혼란을 한층 조장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북미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 또한 이를 남한의 대미 압력차단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포함한 정치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북미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민주화 및 인권문제 등을 거론한 바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미·일 등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체제공존의 분위기 유도 및 민족주의적 감정고취를 목적으로 대남접촉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나 단기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VI. 맺음말

북한은 체제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의 고질적 문제점인 경제제도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군사비 부담의 증가로 체제의 토대에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71) 「조선중앙방송」, 1994.7.10.

경제·군사적 위기를 가중시켜 북한은 체제존립의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였다. 북미협상의 진전으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되었지만 핵문제가 완전히 풀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출범을 앞둔 김정일 정권은 이처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핵문제 해결 및 대미·대일 관계정상화라는 중대한 외교군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통제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대미·대일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러의 대한수교 등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미·대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난 회복과 군사적 고립타개에 기여함으로써 체제 유지 및 정권안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대미·대일관계정상화에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탈냉전 시대에 걸맞게 북한을 동북아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의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전망이 아주 어두워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와 정권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딪힐 문제도 심각하다. 북한은 이미 상당부분 퇴색되어 버린 폐쇄적 정책기조를 외형상 견지하면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자주·평화·친선이라는 협력지향적 대외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공업 혁명」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다. 이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로부터 ‘자본주의적’ 사상이 북한내부로 스며들어 옴으로써 주민의식 변화, 부정부패, 정치적 비판 등 사회적 부작용은 결코 현재보다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회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의 결과 북미·북일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체제결속을 위한 가상의 적이 사라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기반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남북대결과 남북간의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개혁요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시도할 것이나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서 개혁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등 변형된 주체사상을 통한 심리전·사상전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경우 남북관계는 실리적 협력 보다는 이념적 논쟁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구체적 세부 안전들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음으로써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경수로 건설 지원과 같은 핵문제 해결의 ‘담보’는 장기간을 요하는 문제이고, 북한의 대내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북한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국방병진노선」에 집착하고 있는 김정일의 정세인식을 감안해 볼 때 경제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해결의 난항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향후 2년 앞으로 다가온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 동안에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군사적 토

대를 마련함으로써 정권유지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군사부문의 위기가 사라지면 군경제의 민수화 논의 및 대남협상을 통한 군축논의 등 「경제-국방병진노선」 지속에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부문에서 일본 미국의 경제지원으로 최소한의 체제유지 기반을 갖추게 될 경우, 농업·경공업·상업 등 대내경제분야의 과감한 개혁의 요구가 증대되어 개혁정책의 선택을 두고 엘리트간의 분열 및 김정일 유일지도체계에 대한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우리의 對北政策

朴 鍾 喆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현안별 대책 |
| II.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 V. 맺음말 |
| III.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 |

I. 머리말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남북관계는 세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 첫번째 시기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2년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남북대화가 전개된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채택과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이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실질적 교류·협력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대는

빛나갔다.¹⁾

남북관계의 두번째 시기는 1993년부터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한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했으며 다른 차원의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거나 북한핵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논의되게 된 점이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1993년 6월 이후 북·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전개됨에 따라 남북대화는 북·미 대화와의 연계 속에서 취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북한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1994년 7월 김일성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김정일정권의 성격 및 정책방향, 북·미 관계의 전개, 한국내부의 정치적 상황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될 것이다.

첫째, 김일성 사후 북한 신정권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안정, 대내외정책과 대남정책 등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신정권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화정도, 엘리트집단의 연령비율, 당·정·군간 충원비율, 출신지역분포 등 엘리트연합구조의 성격,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자율성 등이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성격에 따라 대남정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1) 1992년 11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었던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제9차 고위급회담(1992년 12월 예정)이 무산되었으며, 1993년 1월 25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장접촉을 끝으로 고위급회담 틀 내에서의 남북대화는 중단상태에 있다.

둘째, 북·미3단계회담 이후 북·미간에는 핵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관계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북·미 관계의 진전속도와 관련이슈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미 합의성명에 나타난 대로 경수로건설 및 대체에너지 지원문제,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등과 관련하여 남북대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대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남북대화를 어떤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이 요청된다.

셋째,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내부의 정치적 논란은 향후 대북정책 수립의 국내적 요소로서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는 부문이다. 김일성사후 한국내의 조문파동, 박보희 세계일보사 사장의 북한 방문(7.13~23)²⁾, 서강대총장의 주사파 관련발언 등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한국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금 입증하였다. 북한의 권력교체와 북·미 관계개선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북한의 권력교체, 북·미 관계개선,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내 다양한 견해의 표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일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대

2) 박보희는 7월 23일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의 구두메세지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공보처는 7월 25일 박보희가 미국영주권 소유자라는 것을 이유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7종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

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구도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국의 기존의 통일방안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목표와 단계, 미래상 등을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統一大綱이다. 통일이 반드시 통일방안대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방안은 장기적 정책구도를 제시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책적 지침역할을 한다. 한편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또는 이슈별 정책방침이며 핵정책, 경제협력, 군비통제 및 군축,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에 대한 정책을 포괄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북한 별목공문제, 남북자문제, 범민족대회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현안대책들은 상호관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각각 다른 차원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3부문간 정책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며,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거시적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현안대책간의 간격을 줄이고 정책의 현실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거시적 大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및 남북현안별 대책은 통일방안의 기본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변화에 대해 신축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현안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

1. 미래지향적 민족공동체의 건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권력배분에 관한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³⁾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에 우선을 두고 있다. 물론 통일은 최종적으로 남북한간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협상 과정에서 권력의 분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간 신뢰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해 논쟁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며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권력의 분배보다 민족공동체건설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의 외형적 정치적 모습보다 통일의 실질적 내용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민족공동체개념은 이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강조된 것이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이점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요인에 근거하여 동일한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직·간접적이고 다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⁴⁾ 민족공동체는 민족적 동질성⁵⁾을 바탕으로 공동의

3)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연방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상정하고 있으나, 연방국가의 구성원리를 구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라는 성격상 고려연방제에 있어서 남북한 지역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은 핵심적 문제이다.

4) 김종립,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형성이론,” 국토통일원 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61.

5) 민족적 동질성의 기준으로는 언어, 혈통, 종교, 문화, 역사 등 객관적 요인과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있다. 차기백,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pp. 45~62.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민족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며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는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는 정치공동체나 생산과 분배, 거래행위의 단일권 형성을 의미하는 경제공동체, 사회적 가치규범과 행위의 공동영역 형성을 의미하는 사회공동체 등과 인적 구성 및 영토, 관할권 등에 있어서 일치할 수도 있고 중첩되거나 상충될 수도 있다.⁶⁾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민족공동체형성은 단일의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지향한다. 따라서 한민족의 경우 민족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며, 때에 따라서 해외교포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며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족공동체형성은 기존의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민족은 단순히 역사적 전통과 언어, 혈통 등의 요인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제도와 정치적 질서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남북한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은 과거의 공통분모를 확인·확대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질성을 확보해 가는 미래지향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6)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체를 정치공동체와 일치시키려는 이념이었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미국, 중국, 캐나다 등)가 있으며,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분산된 경우도 있는 것과 같이 민족공동체와 정치공동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2. 통일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자주, 평화, 민주를 강조하고 있다.

자주원칙은 통일이 한민족의 뜻과 역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분단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변국 및 국제환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구상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다만,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한민족이 주도권을 장악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구도에 입각해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⁷⁾

평화원칙은 남북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평화원칙은 통일수단으로서의 평화적 방법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구조의 해소, 더 나아가서 남북한 각각에 있어서 폭력적 장치와 구조적 억압기제들이 제거되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⁸⁾

7)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구영록, 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pp. 293~298.

8) “전쟁의 부재” 상태를 소극적 의미의 평화라고 한다면, 사회내의 갈등과 구조적 폭력들이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호재, 오택섭, 최상룡, 안문석 공저,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서울: 법문사, 1989), pp. 21~23.

그리고 민주원칙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통일시기, 통일절차,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국민 모두의 견해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정치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3. 통일미래상

통일이 분단된 남북한의 물리적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통일한국의 이상인 동시에, 역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추진되어야 할 종합적 정책과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통일미래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이념체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이 각각 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할 이념체제이기도 하다.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기본권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원리의 정착과 함께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경제의 경쟁원리와 시장경제의 원칙 위에서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질서가 정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4. 점진적·단계적 통일

한국의 통일방안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의한 남북간 동질성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며, 이러한 근거에서 기능주의적 통일방식 또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불리운다.⁹⁾

흡수통일은 실현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한에 의한 무력통일이나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병합결정에 의하지 않는 한 흡수통일의 실현가능성은 없다. 북한의 정치변화는 지배연합세력의 교체(김일성의 사망, 김정일의 실각 등), 정치체제의 변화(제한적 다원주의체제나 신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전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북한에서 단기간 내에 정치체제 차원과 사회주의 체제 차원에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이질화된 남북한이 단시일에 통일됨으로써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할 때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약 상황적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흡수통일과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흡수통일의 무용성을 인식할 때,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점진적·단

9) 기능주의이론이 거래와 교환관계의 확산(spill-over)과 다기화(ramification)에 의한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신기능주의이론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및 거래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정치·군사문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p. 48-54.

계적 통일방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연합 단계 이전에 화해·협력단계를 추가하여 이 단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5.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

김영삼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단계적 통일방안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남북관계에서 향후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에 대한 강조는 북한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통일의 후유증을 흡수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내구력과 포용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서 남한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한에서 먼저 통일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한국사회의 건전성을 키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I.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1. 적극적 대북정책 수립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일성의 사망과 북·미회담의 전개,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 등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점검과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책의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응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수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그 의미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 및 통일환경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청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제적 협조를 모색하는 적극적 입장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종합적 통일·안보정책 구상

냉전체제에서는 안보정책 우선 하에서 통일정책이 고려되었으며, 대외정책은 대미관계를 기조로 한 단순구도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후 세계질서와 동북아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통일과정, 통일한국의 대외관계까지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통일·안보정책의 구상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긴장완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식¹⁰⁾, 북·미

10) 미국은 1993년 11월 초 북한의 「일괄타결」(package deal)방안을 수용하여 「포괄적 해결방안」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포괄적 해결방안의 모호성에 대한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어 한·미 정상회담(1993.11.23)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되 해결과정에서 모든 방안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철저하고 광범위한」(thorough and broad) 접근방식이 합의되었다.

대화와 남북대화의 연계¹¹⁾, 과거 핵투명성문제¹²⁾, 북·미 관계개선 속도¹³⁾ 등에 대해서 견해 차를 보여왔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북한핵문제, 북·미 관계의 개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각각 자국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영향력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슈별로 주변국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입장이 상충되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질서가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 대외정책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정책구상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이슈별로 다차원적인 정책구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정책구도에 입각하여 주변국과 공통관심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북한내 정치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과정에 한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따

-
- 11)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의 연계와 관련하여 1993년 5월 이후 남북특사교환이 쟁점이 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회담의 경직된 연계정책에서 벗어나서 남북특사교환을 철회(1994.4.15)한 바 있다.
 - 12) 한국내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북한핵의 과거문제보다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 확보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 13) 북·미 3단계회담의 합의성명 발표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조절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라서 한국의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안정적 변화와 북한내 개방·개혁세력들의 입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남북간 긴장 유발과 돌발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안정은 폐쇄체제와 적대적 대남 정책의 유지라는 정태적 차원의 안정이 아니라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방·개혁과 남북공존체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동태적인 안정을 의미한다.

4.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의 병행

한국정부는 핵문제가 민족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최우선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상황에 따라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는 입장을 지녀왔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핵문제에 종속되었으며, 핵문제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견지되었다. 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는 이러한 방침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이 정책변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으며, 북·미3단계회담에 의해 핵문제해결의 기본구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의 병행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도 북·미관계, 주변국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구도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체적 맥락 속에서 북한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일정시점 혹은 단계에서 분리추진 내지 병행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순서를 밟아야 하며, 각 단계마다 핵문제해결을 보장하는 돌파구들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5.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성실히 이행될 경우,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내포된 문제들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때, 모든 사안들이 전면적으로 동시추진되기에는 힘든 측면들이 있다. 따라서 이 합의문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삼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때 이를 협력·지원할 것이며, 남북 협력사업을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한 것은 시사적이다. 민족발전 공동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익이 되고 공동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현안별 대책

1. 북한핵의 투명성문제

북·미3단계회담의 합의성명(1994.8.13)에 의하면, 북한핵투명성 문제는 ① 5MW원자로추출 연료봉의 재처리금지 및 연료봉재장착 금지(1994년 6월 20일 및 22일 합의사항), ② 50MW원자로 및 200MW원자로의 건설 동결, ③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④ 「비핵화 공동선언」이행, ⑤ NPT회원국으로 잔류 및 핵안전협정의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북한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로서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이행사항들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사항들이 핵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며 앞으로 이 안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동시에 이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며 사안의 긴박성과 복잡성에 따라 미국측 반대급부의 이행과 연관되면서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우선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과거의 핵투명성확보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 확보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적 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 처리문제가 현재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다. 북한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폐연료봉의 처리기한을 8월말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수조

속에 저장된 폐연료봉의 처리방안으로는 제3국에서 재처리하여 보관하는 방안, 건식연료봉 보관용기를 건설하여 보관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선 습식연료봉을 화학처리하여 보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 또는 합의는 9월 10일부터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핵문제 전문가회담과 9월 23일 개최 예정인 북·미3단계회담 2차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핵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50MW원자로 및 200MW원자로의 건설 동결,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등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은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 뿐이며, 이 문제는 북·미3단계회담 2차회의 내지 추후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핵투명성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특별사찰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북·미 합의사항에서 NPT 잔류와 핵안전협정의 준수를 약속한 만큼 핵안전협정의 71조-73조에 따라 임시·일반사찰과 특별사찰도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마이크 매커리 미국무부 대변인도 8월 15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단 특별사찰의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언급하였다.¹⁴⁾

그러나 북한의 강석주 북·미 회담대표는 8월 13일 기자회견시 「현 단계에서 특별사찰을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정부가 특별사찰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하고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1994.8.17)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북

14) 「한국일보」, 1994. 8. 17.

한외교부는 8월 20일 외교부대변인 회견을 통해서 특별사찰을 조건으로 한 경수로 건설지원은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사찰문제의 전제조건여부는 한국정부내에서도 정책조정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한승주외무부 장관이 8월 22일 「특별사찰이라는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8월 25일 「과거 핵규명을 위해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과거 핵투명성 확보 원칙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문제는 과거 핵투명성 확보의 절차와 방법이다. 과거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② 핵개발활동에 대한 북한의 자진신고 및 이에 대한 검증, ③ 미신고시설에 대한 북한의 추가신고 및 이에 대한 임시 일반사찰, ④ 5MW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에 대한 정밀분석, ⑤ 미신고시설 주변의 토양, 물, 식물 등 환경시료채취(field test)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또한 몇 개 방안들이 동시에 이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북·미간 전문가회담 및 추후회담과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 협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 남북대화 재개문제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북한의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김

일성의 유고로 정상회담이 연기되었음을 7월 11일 한국측에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김일성사망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정상회담원칙은 유효하며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단락 되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지연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체제정비의 시간필요, 대미관계우선 입장, 김일성 사망후 한국의 태도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이 정권교체 초기에 체제안정을 기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남북간 신뢰구축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한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와 장악능력이 부족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협상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 더욱이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개선의 속도를 맞춘다는 점에서나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될 경우,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원칙과 세부절차가운데 유효한 사항들도 있지만 정상회담의 개최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북·미3단계회담 합의사항중 「비핵화공동선언」준수 조항을

근거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남북상호사찰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 특히 과거 핵규명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차원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이 문제가 남북간에 논의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수로건설지원 및 대체에너지 지원문제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다자간 및 양자간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나 별도의 실무협의회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3. 북한 경수로건설 및 대체에너지 지원문제

북한은 한스 블릭스(Hans Blix)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시(1992.5),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 방문시(1992.7) 경수로보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1993.7)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미국의 합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북·미3단계회담의 합의사항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에 2백만 KW의 경수로건설과 대체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경수로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문제를 핵문제해결의 핵심사안으로 제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생산에 부적합한 경수로건설을 통해 핵무기개발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수로건설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및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 원자력법, 핵확산금지법 등이 개정되

어야 하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조치의 해제를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¹⁵⁾ 또한 경수로 건설은 막대한 자금소요로 말미암아 국제적 컨소시엄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지원과 다자간 경제협력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수급체계의 개선과 대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 이유를 지니고 있는 측면도 있다.

경수로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문제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9월 10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북·미간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수로건설은 10여년의 기간과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이다. 북한의 경수로건설지원에는 지원방식, 자금 및 기술제공 분담, 재원조달방법 등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수로건설의 지원방식은 대체로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G-7국가와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금 및 기술제공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자금과 기술을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의 이해

15)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여러 종류의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규제와 무역금수(embargo) 등의 조치 외에도 테러리스트 국가조항과 인권조항, 공산주의국가 및 이전 공산주의국가 조항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무역 및 통상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An Asia Society Research Project for the Rockefeller Foundation,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1993), Appendix D: Restrictions on US-DPRK Economic Interaction 참조.

및 관련국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북한은 원자로경협 축적과 한국형 원자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러시아식 VVER형을 선호하였다.¹⁶⁾ 강석주 북·미회담 대표는 북·미3단계 회담 직후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경수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북한간 불신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미국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북한은 8월 27일 중앙통신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은 처음부터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대미전문가회담을 고려한 협상용이라는 측면과 한국형 경수로 도입에 수반될 기술적·경제적 의존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형원자로는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수로형으로는 부적합하다. 한국형 원자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 러시아형원자로보다 뛰어나다. 한국형 표준원자로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국의 컴버스 엔지니어링사와 기술 협조하에 한국형으로 개발한 원자로로서 한국은 95%이상의 기술 자립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수로건설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경제적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를 계기로 남북간 신뢰구축과 에너지협력¹⁷⁾, 경제협력 등이 촉진될 것을 고려

16) 북한은 1980년대 말 新浦지역에 소련형 원자로건설을 위한 단지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 남북한 전력체계의 일원화라는 점도 한국형 원자로를 북한에 건설해야 할 이유중의 하나다. 일본의 경우, 關東지방에는 비동형 경수로(BWR)가 건설되어 있는 반면, 關西지방에는 가압형 경수로(PWR)가 건설되어서 에너지수급체계가 이원화된 문제가 있다.

할 때 북한의 경수로로는 한국형 표준원자로가 되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북한핵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북한의 경수로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것은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수로건설지원에 대한 문제를 핵문제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발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와 호혜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한 것은 참신한 접근이다.

경수로건설의 자금부담에 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국제기구 등이 공동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국내법상의 문제를 이유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은 북·미 수교협상 재개를 통해 대일청구권자금의 일부를 경수로건설 자금으로 상쇄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도 북한핵무기해결을 위한 경수로건설에 공동참여해야 할 것이다.¹⁸⁾ 한국의 자금동원방법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의 이용, 국제차관도입, 특별예산책정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수로건설자금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는 생산전력을 남북한이 공동이용하는 방법과 북한의 원자재로 상환 받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경수로건설과 함께 대체에너지 지원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북

18) 이흥구 부총리는 8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도 동북아 안보유지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자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은 심각한 전력난과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전력 및 에너지분야에서 협력하면 이것은 남북협력사업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남한의 전력수요가 여름철에 많은 반면, 북한의 전력수요는 겨울철에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남한의 잉여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4. 남북경협문제

북한핵문제 대두 이후 한국정부는 대북경협을 대북 영향력 행사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핵·경협 연계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핵·경협 연계정책은 북한의 입장변화를 초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동시에 한국의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과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 의식에서 대북경협을 원하고 남북관계의 전반적 틀과 정치·군사적 이유를 우선시하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지녀왔다.

북·미 합의성명 내용중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북·미 경제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북·미 경제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무역방문단의 북한방문에 관해 미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재계가 발빠르게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²⁰⁾ 또

19) 상공자원부는 8월 16일 남북한의 전력수급 상태를 감안할 때, 겨울철에 남한이 2백만 내지 3백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1994. 8. 17.

20)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이미 1992년 미정부에 대북금수조치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일보」, 1994.8.11; 미국의 대북 투자 관심과 북·미 경제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박종철,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89~115 참조.

한 북·미 관계 진전에 따라 1992년 11월 8차회담 이후 중단된 북·일 수교교섭이 재개되고 북·일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계와 경제부처는 북한시장이 다른 나라에 의해 선점분할되기 전에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하여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흥구통일원부총리는 핵문제의 해결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협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핵문제해결의 진전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²¹⁾

앞으로 북한핵문제의 투명성확보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핵문제해결의 단계별 돌파구(5MW 폐연료봉처리 합의, 50MW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건설중단,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특별사찰, 남북상호사찰 등)에 따라 기업인의 방북허용, 한국기술자의 파견, 남북직접교역, 대북투자허용 등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조치들을 각 단계별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으며, 대체적인 구도 하에서 상황에 따라서 묵시적·점진적으로 경협을 확대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경수로건설 및 대체에너지 지원을 계기로 에너지협력사업분야와 이와 관련된 사회하부구조 건설분야에서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21) 「중앙일보」, 1994. 8. 17.

5. 이산가족 및 인도주의 문제

이산가족문제와 납북자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은 인간의 기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기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체제의 정통성 및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문제 및 납북자 송환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부상했다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회적 과정을 밟아왔다. 그런가 하면 북한내 인권문제와 납북자송환 요구는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 시킬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은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어 왔다.

그러나 1994년에 접어들어 북한벌목공의 귀순문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북한인권 실태보고(1994.7.30)²²⁾, 납북자문제²³⁾ 등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및 인도주의문제가 남북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 및 납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1994년 5월 9일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동진호선원을 비롯한 납북자 4백여명의 귀환과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실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납북자문제에 대

22) 국제사면위원회가 승호리수용소 등 정치수용소 현황과 수용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수도여교교사 고상문씨가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8월 2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고상문씨의 송환요청을 전달하였다.

23)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53년 휴전 이후 납북자는 해상납북자 417명, 항공납북자 21명으로 총 438명이며, 실제 억류 인원은 429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서울: 통일원, 1994. 8), pp. 136-137.

한 최초의 종합적 문제제기였으나 당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결렬된 상태에서 북한이 미전향장기수(김인서, 함세환 등)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벌임으로써 실효가 없었다. 강영훈 총재는 8월 12일에도 이산가족재회를 위해 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8월 15일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이산가족문제, 남북자문제 등이 인도주의와 민족복리증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탈주자문제나 남북자문제 등을 남북대결과 홍보차원에서 대응한다거나 언론에서 센세이셔널리즘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동 문제의 해결이나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도주의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종합적 대책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이와 병행하여 동 문제의 해결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및 인도주의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간 대화창구개설을 모색하고 북한귀순자들의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관련법규들을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⁴⁾ 그리고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해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들의 서독이주를 성사시

24) 이와 관련 정부는 8월 17일 귀순자들의 정착금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 案을 확정하였다. 「한겨레신문」, 1994. 8. 18; 한편, 대규모의 북한 난민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켰던 방식도 검토될 만하다.²⁵⁾

V. 맺음말

김일성의 사망과 북·미대화의 진전으로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은 냉전적 유산의 잔존과 새로운 질서의 모호성, 북한상황에 대한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한층 불확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유동적 상황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한 동시에 그만큼 기회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목표와 전략, 수단 등을 정립함으로써 통제불가능한 영역을 최소화하고 통제가능한 영역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되, 상황변화에 대한 사후적·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 정책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 하에 장기적 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 정책방향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통해서 남북공존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북포용정책과 대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시에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

25) 1963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정치범은 3만 3천 7백 55명이며, 서독은 이를 위해 34억 4천 마르크를 지불했다. 「중앙일보」, 1994. 8. 9.

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와 함께 통일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통일투자비용, 통일후의 관리비용 등 통일의 실질적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이에 대한 준비도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결정구조와 국민적 합의형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부부처간 및 정부와 국회, 언론간 통일관련 정보의 공유와 정책결정과정의 공론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여론의 산술적 합계에 치중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가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빈 면

Ⅱ. 綜合討論

빈 면

綜 合 討 論

〈 토 론 〉

- 사회자: 안병준 (연세대 교수)
- 토론자: 양성철 (경희대 교수)
서시주 (연합통신 지방부국장)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
도준호 (조선일보 북한부장)

양성철: 박종철, 김병로 박사께서는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남북한 현안 문제 등 종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의견을 저와 같이 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은 빼놓고 분위기를 돋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견 또는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김병로 박사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병로 박사께서는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문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확실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론 및 정책을 전개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복지부동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도 복지부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표면에 나타난 북한의 대미대화, 3단계 2차접촉, 전문가회담 등 비교적 순조롭게 김일성 사후의 쇼크에 대해 잘 대응해가는 인상을 주

었는데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남겼던 국가 및 당 관련 직함과 수령 등의 칭호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망후 100일이 공교롭게도 9.9절, 10월10일과 같이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가주석, 당 총비서 등을 승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넘기는 날짜가 되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사망에 대한 추모행사와 통치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치행위를 아버지 사망행사로 인해 계속 미룰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김정일이 안고 있는 문제를 김병로 박사는 실용주의적 개방노선으로 갈 것이라 하셨지만 김정일이 과연 모든 것을 극복하여 새 지도자로 부상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경제가 계속 급강하하는 상황에서는 인민들이 탈출구나 도피행각을 하는게 대중적 현상입니다. 소말리아, 르완다, 쿠바의 경우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기미를 보이고 사실적으로 생활이 좋아지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계속 급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는 기미가 보일 때는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좌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혁에는 개방이 뒤따르게 되고 개방에는 개혁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철 박사의 논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통일방안대로, 말하자면 통일을 계획대로 예측한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 실현 과정을 보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단국가로서 통일에 대한 구상, 방안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과거에 나왔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나타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3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념문제입니다. 민족이라고 했을때 민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념정의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어서 민족 얘기를 할 때는 민족주의가 바탕이 되어왔는데 한국의 민족주의의 성격, 기원 등의 문제에 아무 콘센서스가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이 한국 통일방안에 들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철 박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해외동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일이 안된것은 민족공동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남북한에도 민족공동체가 있고 또 과거 일제시대에 민족말살정책에 반기를 들고 뛰쳐 나갔던 러시아, 만주에 있는 한국의 민족공동체 즉 코리안 커뮤니티가 있었고 또 2차대전 전과 후에도 하와이 등지에 한국민족의 코리아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 민족공동체, 한국 커뮤니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커뮤니티는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가 가져야 할

국가가 해방 후에 남북한에 2개가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2개의 국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 문제제기의 출발점이나 이론의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통일방안의 종착역이나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7천만동포들을 모두 모아서 민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민족공동체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50년이라는 분단상황 속에서 생긴 이질성에도 근본적인 민족으로서의 고도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게 한민족인데, 아직도 2개의 국가로서 오르렁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2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다시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출발점과 종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나온 통일 방안을 보면 분명히 3단계 통일방안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1단계가 화해 협력단계이고 제2단계가 남북연합단계고 제3단계가 단일국가단계로 되어 있으니 왜 그냥 3단계 통일방안이라고 한다든지, 영어로 한다면 one Korea one state 통일방안이라고 하지 구태여 민족공동체라는 말이 들어 있는가 또 가만히 보면 민족공동체와 3단계 통일방안이 이론적으로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박종철 박사께서는 이번에 나온 통일방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민족주의에 대한 반론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열린 민족주의라고 말씀하

썼지만 그러나 이번에 나온 통일방안이나 통일철학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명시화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은 시민,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도 개인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역시 개인주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족공동체는 집단개념입니다. 집단개념과 현재 내놓은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민족의 순수성이라든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신화라면 신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으로 생각하는 한국민족 이외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시대조류나 미래지향적인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박사께서 제시한 여러 대안 중 제가 동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종합적인 통일안보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협화음이 있느냐 없느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판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북방정책은 국민의 갈채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적대 국가라고 생각되었던 소련, 중국 등과 국교를 맺고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마무리져서 이런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거의 실무 관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거꾸로 판이 바뀌어서 이제까지 고립되었던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볼 때는 또 국민들 쪽에서 볼 때는 만약 냉전적인 사고로 북의 이익은 우리의 손해다 하는 생각으로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에서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안보 수석진은 박정희 대통령 때 나온 60, 70년대의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지금 90년대에 와서도 안보수석, 경제수석, 공보수석, 무슨 수석해서 이렇게 수석제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두개의 대통령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소위 외교대통령과 국내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유념할때, 안보, 외교, 대외정책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외교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아직도 여러 수석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것이 종합기능을 하는데서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인덕 박사님.

강인덕: 김병로 박사하고 박종철 박사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꼭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학자들이 북한에 관한 연구를 이처럼 많이 했나 하는 것입니다. 김병로 박사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 김일성전집, 저작집 또 김정일 저작집 등을 통독해서 김일성 저작집해제 또 김정일 저작집해제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참 엄청난 양의 북한의 문서를 읽었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논문을 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미나가 지금 북쪽의 김정일 체제의 변화, 전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박 박사는 우리의 대북전략, 통일문제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논문을 읽고 전적인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면 여러가지 사항이 가능하겠습디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꼬집어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병로 박사의 경우에는 18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김정일의 정세인식이 김일성의 정세인식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점을 좀더 명백히 해줬으면 우리가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북쪽의 김정일 체제에 관한 전망을 내리는데 있어서 역사 및 정세에 관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한 김정일의 의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명백히 얘기한다면 김일성이 과거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금년 2월 25일 전국 농업대회에 보낸 편지 서한을 보면 남북 간에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북한의 도그마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월 25일에 보낸, 전국 농업대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협동적 소유제를 전인민적 소유제로 바꿈으로써 사회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그래서 평안남도 속청과 함경북도 선봉에서 실험을 끝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958년 중국에서 만들었던 인민공사 제도로, 즉 군단위에 국영 농장 하나를 만들고 각 리에 협동 농장은 그 분장으로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남북 간의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북쪽의 사회주의에 변화가 있어야 통일문제에 접근 할텐데 이렇게 불변인 북한체제하에서는 통일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경우, 작년에 내놓은 “사회주의를 궤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논문을 읽어보면 김일성과 이데올로기적인 정세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실용주의로 돌아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하나 체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정부의 여러 정보기관이나 대북관계를 분석하는 기관이 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북쪽의 김정일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 여러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세력으로 봐서 또 20년 간의 그의 권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봐서 우선 정권인수는 그런대로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왜 지금 한 2개월 동안 발표하지 않는가? 애도기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애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김정일이 자기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을 유지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체제에서 김정일이 그대로 온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편의 과정을

밝으며 지금 준비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자신의 등장을 내외에 성대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당 대회 같은 것이 개최되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당 대표 대회 같은 것이라도 가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결국 그를 위한 준비과정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북쪽의 김정일체제에 새롭게 등장하는 바람직한 징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등소평이 1980년 8월18일에 발표한 “당과 국가의 지도, 제도개혁에 관하여”라는 담화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북쪽의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희망을 조금 가져도 될 것입니다.

등소평이 제시한 내용에는 중앙집중제, 민주집중제에서 일당독재를 하다보니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았으며 민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권제는 안되고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당 중앙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안되니까 당대회에서 고문위원회, 규율위원회, 당 중앙위를 선출, 그 세 기구가 상호 견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변화된다면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징후일 것입니다.

또 하나, 등소평이 얘기한 것 가운데 결직 제도를 가능한 적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副)’자가 너무 많다, 즉 부장과 부장 다음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부부장, 차관이 불필요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김일성 사망 전 것입니다만 북한에 정말 ‘부(副)’자가 많습니다. 외교부에 강석주 제1 부부장 이외에 부부장이 13명입니다. 사회안전부에 부부장이 11명, 국가기획위원

회에 부부장이 13명, 심지어 어느 전력 공업위원회의 부부장이 1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체계가 종적인 체계로만 연결되고 횡적인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능률적인 관료주의가 깊이 뿌리 박게 됩니다. 북한이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를 이제부터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북쪽의 변화 징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병로 박사께서 제시한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개혁, 개방으로 이행하는 징후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두만강개발 지역의 개방도 이제 겨우 16개 법령규정밖에 만들어 내지 않았으니까, 중국의 경우를 보면 도시경제계획 개혁에 착수할 때 500개가 넘는 법률규정안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징후로서는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면에서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좀더 힘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은 경제 이론에 관한 북측의 재해석입니다. 금년에 발표됐습니다만 작년의 문서, 1993년 경제연구 제4호에 이명서 박사가 쓴 “시장경제의 반동성”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 개방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소유제, 고용관계를 거부하고 생산관리 문제, 노동시장 문제 심지어 상품이론에 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측이 개혁으로 가려면 상품이론에 관한 북측의 재해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품만 상품이고 기계같은 것은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넘겨지는 거니까 상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개혁, 개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

다. 중국의 경우도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이 나오기 전에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에 관하여 계획적 시장경제이론등 수많은 이론이 나왔는데 그런 이론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개혁문제가 파악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통일 문제도 개혁, 개방으로 가면 크게 거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북한의 그 변화 징후에 관한 평가를 좀더 세밀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철 박사께서는 기본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잘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남북간의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도 탈냉전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탈냉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서 왔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낳은 내부모순이 누적된 결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이 왔는데 탈냉전의 구체적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탈냉전이란 뜻을 군사적인 대결상태 또는 통상 협력관계의 화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1990년 11월 파리선언에서 발표한 내용이 탈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선언에서 동서유럽이 다원적 민주주의의 법에 의한 지배, 인권과 같은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 등을 한 해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탈냉전이 가능했습니다.

탈냉전은 남북간의 탈냉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념적인 공통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의 변화가 통일 정책의 기본이며 이런 관계에서 통일 문제란 바로 개혁, 개방으로 가서 남북간에 교류 및 협력이 증대되는 것라고 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 정책의 큰 변화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엇그저께 우리나라의 진보적 신문인 한겨레신문 또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모든 신문이 비판적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북 정책이) 8번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핵문제 때문에 바뀐 것을 얘기하는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8번이나 정책에 변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움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통일 정책과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의 가장 취약한 점을 우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를 안기부가 맡는다고 중앙정보가 되는것이 아니고 외무부가 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족한 이 정보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종합분석 판단 과정을 정부가 좀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서시주 국장님.

서시주: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분석해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이 금방 변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김일성 주석이 죽은 지 한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학자나 그 당시의 정책입안자들은 금방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질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런 얘기를 하나하면, 우리가 현재의 북한을 두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도에서입니다. 현재 김일성 사후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분의 발제 논문에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또 통일문제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부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나 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일 체제의 수립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여러 전문 학자들께서 김정일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빠르면 3개월 이내에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술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 문제는 북한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보부채로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중 명의(名醫)가 나와서 과연 북한이 안고있는 그 병의 증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면 우리의 통일방안도 수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병로 박사께서는 김정일 체제가 - 김정일 체제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만 - 앞으로 한 2년간 사회주의 체제의 완충기로 잡고 그런대로 지속되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김정일체제가 2년 내에 망하느냐 또 앞으로 한 1년 내에 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체제가 망하지 않을 때도 우리 통일문제에 상당히 중

요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 김일성 사후 북한의 변화 모습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에서 두 박사가, 특히 김병로 박사가 지칭하고 있고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책적인 면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서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경제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외교고립 때문에 갈 곳은 그 길밖에 없다는 탁상공론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점은 북한 체제를 남한 체제와 동일한 척도로써 측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집단과 조금 다른 체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의 자를 갖고서 북한의 인민들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 북한이 금방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북한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위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학자들의 논리가 많습디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체제가 공고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5년간 이 지구촌에서 다른 어떤 의식과도 다른 - 일종의 행복신화라고 할 수도 있는 - 神話論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두끼 먹어 배가 고프 나머지 탈출한 별목공도 있습니다만 그건 극소수에 그치고, 그래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 내지 우월감과 자존심 등으로 체제를 지탱해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너무 무게를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르고 소련, 중국과도 다른 특수한 체제입

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김일성이 처음에는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보면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귀순자들의 얘기에서 연유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북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명의(名醫)가 되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현주소를 진단해달라고 두 발제자에게 제가 먼저 제기를 합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을 진단하는 정책입안자들이 너무도 북한을 잘못 알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강인덕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북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곧 무너질것 같은 보도와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보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권을 잡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보다 지나친 남한의 보도가 세계를 통해서 북한체제에 들어갔을 때는 북한 인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보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얘기 같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책적인 면이 아닌, 김일성 사망 이후의 2300여만명의 북한 인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하는 문제도 전문가가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끌고가는 것은 물론 집권 지도층입니다. 그것은 김일성 생존시 가능한 것이고 김일성이 없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행을 할 정도로 강한 지도력을 갖고 이끌어 간다하더라도 과연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없겠는가 또 외부사상의 유입이

없더라도 그런 변화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현재 우리 통일안보팀의 정보 조정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통일안보 조정회의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진단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지금 현안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북미 3단계 회담을 볼때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고 북한과 미국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3자회담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2자회담 하자는 북한의 그 뜻이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 정책의 변화와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2자회담으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구한말에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각축전이 또 다시 한반도의 남북한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볼때,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정책에서 여러가지의 목소리, 즉 진보와 보수가 싸웠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으나 적어도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 목소리들을 취합, 국민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역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외됐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미국은 남북대화의 재개나 한국형의 경수로 지원유무에 관계없이 세계 통치의 힘을 이용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개선을 맺어놓고, 북한을 NPT체제 속에 잔류시키면 된다는 논리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정부

와 동조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맞추어가는 것일뿐 우리의 국가이익과는 별로 상관없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든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힘은 바로 국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슈만이라도 가지고 남북대화 재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이 그에게 갈루치가 왔을 때 목소리를 높인 것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남북대화가 아닌,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는 남북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서시주 국장님께서 김정일 체제가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해 예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대체로 김일성 체제가 얼마나 오래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학자들 중 예측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점술가들이 더 정확하게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예측하려면 점술가들을 모아 놓고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준호 부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도준호: 제가 마지막에 하다보니 매우 불리한 것 같습니다. 대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제 옆의 양 선생님이 저와 상당히 견해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박사님의 논문이,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병로 박

사의 김정일의 정세인식 부분에서는 김정일의 대학교 졸업논문까지 조사,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른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 정책의 추진, 대남 정책 부문에서 소위 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심리전, 사상전의 강화 예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기초 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실용주의가 상당히 성공할 것이며 또 대미협상, 대일협상에서도 북한이 성공을 해서 상당기간 지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즉,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문에서 김정일의 증풍설 등 여러 소식을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아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7월 8일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김정일이)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과 수령론 내지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수령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효도개념을 내세운 점 등, 제가 보기에는 (김정일의) 개인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관측 또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봅니다.

만약 김정일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일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군과 당간의 협조는 잘 될 것인가, 테크노크라트와 군의 협조는 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두번째는 체제와 정책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북미수교, 북일수교와 경수로 지원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북한의 기본적인 딜레마가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된 상황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형태로든 핵을 보유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협상이 잘 되더라도 핵을 갖겠다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난은 물론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지만 항간에는 과연 김정일이 북한 군부를 구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김정일이 자기 사람들을 군부에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테크노크라트의 이익과 군부의 이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경제 테크노크라트 입장에서는 개방, 개혁에 의한 경제정부의 축적이 제1의 목적인데, 이는 군비축소 내지 무기감축문제 등 병력감축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군부의 이익과 테크노크라트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이에 대한 조정능력을 김정일이 갖고 있느냐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득권층은 사실상 김정일을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지금 대외 선전에는 김정일이 없으면 못산다고 하지만 최근의 여러 정황으로 보면, 중국의 조선족 등을 통해서 외부에 정보가 드러나면서 소위 이중화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했는데, 요즘 통행증이 없어도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정보의 교류 및 유통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이 생존시의 권위보다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냐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종철 박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우리의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세미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종합적인 정책이 없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소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 적합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90% 훨씬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모르는 통일방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따라오시오’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통일방안을 현실성 있고 적합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통일원칙이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의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주와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가 다른데, 이것은 통일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남과 북이 끝없는 말싸움을 해왔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허하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통일방안은 더 현실성 있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난 번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통일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능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사실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해협력 단계 등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도 오히려 국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의 목표와 수단, 이것만 명쾌하게 제시해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뻔하게 서로 속셈을 알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민족 공동체, 민족의 존엄이 보장되고 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명쾌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적인 통일론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북한사람들이 못살아서 그걸 하지만,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올라가면 절대로 북한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박종철 박사의 논문 중에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좀 시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일 바람직하고, 현실성 있는 통일의 방법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러한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외교가 위기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외교가 위기냐고 반문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세라는 것은 재주는 꿈이 넘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돈입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돈내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야되는데, 돈 낼 사람은 큰 소리를 못치고, 북한하고 미국 자기들끼리 경수로가 한국형이 되는니 안되는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핸들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안보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미외교입니다. 그런데 대미외교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하면서 정부에서는 항상 공조체제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조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돈내는 우리 입장의 목소리가 미국과 북한에 제대로 전달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도 앞으로 좀 더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해나갈때 남북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분들에 대한 발표자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박종철 박사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5분내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여러 선생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구도에 관한 것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현안별 대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신 분도 있고, 평소의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양성철 교수님, 도준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될 의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해석상의 몇가지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교수님이 민족공동체 개념의 모호성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민족의 개념, 또 공동체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인상은 양교수님께서서는 민족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을 너무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차 집단의 유대관계에 입각하여 협의로 해석하신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이라는 것이 집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안에는 개인과 또 집단, 계층간에 서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있고, 그것은 민족내 부내에 집단적인 형태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주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민족주의의 대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또 파시즘

이나 나찌즘과 같은 그런 동원체제적인 성격과 결합될 수 있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민족이라는 집단성의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양자를 결합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공동체의 개념에서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끈끈한 1차집단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만, 이것이 정치공동체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정치경제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단순한 혈연공동체라든지 그런 인종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새로운 그런 정치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부장님께서 단계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3단계론을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통일이 되리라는 가정을 하기에는 힘든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2단계가 되었든 3단계가 되었든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흡수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독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붕괴와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병합을 원하는 형태로서의 흡수통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결과적으로 상황이 결과로서의 그와 유사한

방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일방식은 독일에서와 같이 어떤 과도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서독에서 적용되었던 모든 법적·정치적 질서가 일거에 동독으로 적용됨으로써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런 과도단계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통일로 인한 남한 사회의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설사 상황적 결과로서의 흡수통일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상정한 것과 같은 그런 흡수통일과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시주 선생님, 또 강인덕 박사님 여러가지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통일정책의 변화의 문제점, 남북 대화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는냐 또 일관성이 없느냐 이런 문제지적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탈냉전 상황이 지금 초래되어 있고 또 한국 뿐만 아니라 주변4국간에 대동북아 질서가 변하고 있음으로써 동북아질서 자체가 개편되는 과정에 있고 그 와중에서 우리의 대상인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우리 분단체제에서 생겼던 여러가지 정치이념적 문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미성숙이라는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크게 보면 결국 냉전구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겪고 있는 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즉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또 동북아질서 개편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앞으로 더 주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함께 우리는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한의 대내외정책·대남정책은 우리와 달리 아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들도 다같이 지금 시행착오와 과도기적 적응과정을 겪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결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는 남북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특히 북미대화와 병행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병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에게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수로건설이나 대체에너지 지원문제와 같이 우리가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에 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북한이 현재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미국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북미간 어떤 밀월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미국이 반드시 북한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북미간 갈등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과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필요로 할 만한 관심영역들 즉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지않을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병로 박사님입니다.

김병로: 먼저 양성철 교수님께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논문 서두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김정일 정권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정치적 차원에서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저는 김정일 정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김정일의 정책이 1980년대 초 내지는 중엽부터 이미 전개되어 왔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션을 한겁니다. 저는 김정일이 1980년대 초에 등장하면서 특히 1984년 2월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때 대하여”라는 논문발표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북한식의 개혁·개방이었다고 봅니다. 또는 중국이나 동구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지만 제가 논문 앞 부분에서 기술한 대로 소규모의 소폭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했다. 그로 인해서 한 6,7년간에 시행과정을 겪으면서 양교수님께서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도 말씀 해주셨지만 경제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편이 안되었지만, 인민소비품증산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합영법을 통해서, 저는 상대적 박탈감 이전에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을 보면서 경제가 와해되고, 침체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소득구조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양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즈음에 사회주의권이 그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김정일은 여기에 대해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대내개혁은 중단하고, 통제된 대외개방 쪽으로 돌렸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용주의정책에서 저는 그 뒤에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대내개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8월 27일의 계응태의 논문 보고에도 나타난대로 정치적으로 노중청(老中青) 배합원칙을 지키겠다하는 것도 권력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강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분야에서도 전인민적 소유로 계속 가겠다는 것은 대내개혁분야에서는 최대한 개혁을 허용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 외교적인 측면과 대일협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통제된 개방정책 즉 특구를 소규모로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제가 통칭해서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도 강소장님의 말씀해주셨던 그런 의견에다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시주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만 김정일체제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것은 양교수님께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면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체제가 붕괴되려면 기존 정책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되고, 대내개혁분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적인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주민간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게 체제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떤 정보가 통제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볼 때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아직 체제붕괴의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완충기라고 특별히 암시하고 2,3년간만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내개혁을 중단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회복, 핵문제 협상을 위해 대미협상, 대일협상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한 그것이 성사되리라는 전망 가운데 경제난과 핵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될 것 같고,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대내개혁문제라든지, 아까 도준호 부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병력감축문제, 그걸 저는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정책적 수정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일단 조정기가 지나고 나서 최소한의 체제유지 기반이 확보되고 나서 그런 논쟁이 일지 않겠느냐. 그런 논쟁이 일때 다시 김정일 체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부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대해서 몇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특히 건강문제라든지, 핵을 계속 보유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자료도 follow up하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갔다는 정보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책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건강문제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일단 저의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김정일이 핵보유 의지를 계속 지낼것이기 때문에 핵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은 국방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에서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현장감있게 북한정책하시는 분도 뉴욕에서 만날 기회도 있고 해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정말 미국의 군사적 압력, 예방폭격 같은 것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북한의 정책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걸프전 전후로 해서 지나갔고 그 이후 북미협상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벌써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갔다는 것을 북한이 제대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카드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북한도 두가지 측면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이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핵을 끝까지 보유하지는 않을테고, 미국도 이제 정말 양보할 만큼 양보하려는 자세를 갖기때문에 이 만큼해주면, 이 만큼 지원을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면 이 만큼 보여준다하는 철저한 단계적인 원칙을 취해나가면서 핵문제를 경제난 해결과 연결을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문응답이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동안은 플로어에서 질문 또는 논평을 받겠습니다. 누구시든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직함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에 사는 최선영입니다. 과연 우리가 남북문제를 미국에다 맡겨놓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우리가 믿을 만한 나라냐 이것을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백여년전에 미국은 일본과 같이 결탁을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는데 동의를 했고 밀약을 했었습니다. 또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국은 모든 국가에서나 독립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모든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45년 5월 8일날 알타회담에서나 먼저번에 국무장관을 하던 로스쿠 대령이 하루저녁사이에 38선을 그어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소련에게 이북의 점령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소련으로서야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휴전협정 당시 300여명의 외국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는 2사람 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기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한 사람도 안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두 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상대는 너희가 아니고 미국이다, 너희는 미국의 속국인데 왜 우리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냐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가 믿고서 과연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저희하고도 관계없어요, 저희는 돈도 안낸다. 또 한 가지는 너희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고 내가 중간 역할만 해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성이는 남쪽에서는 돈 주는 것은 환영하지마는 韓國型이라는 이름자체가 싫다는 얘기에요. 우리정부는 과연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독립주권

국가로서의 외교정책이나 민족 문제에 있어서나 과연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수립했느냐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자님께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저는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거북합니다. 몇가지 질문 더 받고나서 여기 토론자께서 응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이래야된다 그게 남한의 대통령부터 얘기를 한건데 그게 안된다. 그러면 공산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순성이랄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통일론을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기에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흡수통일은 안된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하나? 또 그다음에 지금의 정보는 정보원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신문에 나는 것도 보면 뭐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김정일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도 진실처럼 통하기도 하고, 요전에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해서 어떻다, 심장병을 앓는다 등의 별소리가 나온다. 그게 일반인도 아니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에서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情報源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원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만 해도 북한이 고립된다 했는데, 요즘은 남한이 고립되어가고 소외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통일

론에 대한 그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지금 소련하고 국교를 열고 중국하고 열고, 동구가 망하고 앞날이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고립, 소외될까봐 걱정하는 논조가 나오는 것 같다. 그에 대해서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에 농락을 당했다고 봐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처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둔다 해도 망한다 하던 것이 지금은 득세한 형편에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북하고 협상을 해서 뭐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종이조각이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몇 번했는데 무슨 합의하고 협상하면 뭐가 제대로 될 것같이 생각하는데 그 保障策이라는게 어디에 있는가. 남북한 단독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믿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북이 지금 내세우는 것이 뭐냐? 이북이 내세우는 것을 지금까지 보면 70년대까지 뭐 경제가 좀 나왔다고 그러지마는 그것도 안되니까 믿는것은 군사력 밖에 없다고 봐요. 요는 재래식 군사력이 안되니까 핵으로 또 위협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럼 경제력이 이 만큼 되었는데도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군사력은 이북보다 우월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등한 정도는 하면은 지금처럼 이북이 고압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걸 왜 빨리 극복못하는가? 무슨 당근을 좀 주고 경제원조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적을 만들고 적을 강하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통일정책인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남에 대해서는 뭐 인권이 어찌구하는데 이북에 대해서는 왜 인

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지? 이북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회담이 안된다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회담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적으로 하려면 혁명 1세대가 살아 있어서는 안되고, 2세대 3세대로 넘어가서 2,3세대가 권력층에 있게되어야 自由의 맛을 알게되고, 그래서 자유가 어느정도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강남에 사는 김기연 입니다. 지금 논문발표도 잘 했습니다마는 이런 논문 또는 정부정책을 보면 통일이 요원할 것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머리 숙이고 들어갈 것같으면 통일이 빨리 되겠지만, 북한은 절대 이쪽으로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도 않고 또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 하루 두끼 먹기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먹어도 데모하면 삼만명이고 백만명이고 기관총으로 사살해버려요. 데모 못합니다. 反정부운동 못합니다. 또 군사적으로 쿠데타 못합니다. 하루 한끼 먹어도 반란 못일어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모여야 데모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는데 원산에서 평양 못갑니다. 어떻게 군중이 집합이 되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저절로 붕괴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하루 한 끼 먹어도 데모하면 기관총으로 사살해서 다 죽이는데 무슨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점을 고려할 때 저절로 붕괴되서 망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망할려면, 통일이 될려면 외부적인 힘, 다시말해 국제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통일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북한에 핵시설중 어마어마한 것은 지상에 있겠지만 지하에 저장되고 지하에서 가동될 수 있는 핵시설은 없을가하는 것을 의심해봅니다. 북한에서는 군화, 양말공장, 군화공장, 옷공장 신발공장서 부터 군수공장이 지하에 많이 있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핵시설이 과연 지상에만 있겠는가 지하에는 없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 이 두 가지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 뿐아니라 토론자 가운데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강인덕 선생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지요.

강인덕: 수 많은 문제를 제시해주는데, 특히 두번째 말씀하신 분 생각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북쪽의 생리가 폭력에 의한 절대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대화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없이 대화 안되고 대화에 힘없이 응했다가는 북쪽이 그저 먹으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3개월전 까지만 해도 유엔 제재가 가능할 정도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무르익었는데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이걸 재건할 길이 없을 겁니다. 미국이 응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우리에게

게 꼭 나쁜 것이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교차승인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국제사회로 북한을 끌어낸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서 연락사무소 설치하는것이 꼭 우리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쁘다는 생각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흡수통일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흡수통일은 붕괴 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붕괴될 수 있도록 우리가 工作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무 쓸데 없는 얘기죠. 할 능력도 없으면서 또 무너지게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그럴 상황을 假定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반대로 스스로 무너졌다고 할 때 피난민이 수백만이 나온다고 할 때 안받겠습니까? 統一費用이 없으니까 우리 못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못받겠다고 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흡수통일이라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입에 올릴 필요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일전에는 북한이 붕괴될 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허튼 소리를 하는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부족되는 정보나마 각 부서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協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 없으면 판단 불가능합니다. 판단 못하면 정책 안나오죠.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정보 기관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외무부로 들어오는 것 안기부가 알고 있는지, 안기부의 것은 외무부에 가는 건

지? 이럴때 일수록 중앙정보(central intelligence) 기능이 작동 해야되는데 작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저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여기 관계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소리해서는 안됩니다만 보안사령관 한 사람 정도가 어떻게 세계정세를 다 분석합니까? 하루가 다르고, 한시가 다르게 늘어나는 정보를 전문가들이 집합해서 분석판단하고 해서 제시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또 변화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같다면 몰라도 다를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누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미국도 중앙정보 기능이 있고, 미 CIA가 힘을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위에 대통령 안보특보라는 것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이용,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신통치 않는데 신통치않은 정보나마 취합해서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담당하는 장관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데, 언동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수같이 학생들 앞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해서 이제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대통령께서 6.25일 날 대통령 연설에서 民族이 어떤 同盟國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동맹국이 10개, 20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워싱턴보다 평양이 낫다는 소리인데, 과연 워싱턴보다 평양이 나은 것인지? 아 하기가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탈냉전이 되서 주적이 없으니까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할 수 밖에 없지요. 북쪽 공산주의자들

이 제일 잘 이용하는게 자본주의 국가와 國家間的 矛盾이지요. 이 용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미국에 아세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상 우리를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과 접촉해서 관계개선하겠지만 실제 經濟的으로 市場性이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꾸만 선점당한다, 미국과 일본한테 선점당한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하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 북쪽에 간접자본 같은 것을 투자해주겠느냐, 이익이 난다고 보는지, 미국, 일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자꾸 평양가는거냐? 그들 입장은 은 명백합니다. 미리 북쪽에게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우리회사가 일본 배상금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지 調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진출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북쪽을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적인 국가이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도 없는 실정에서 통일비용으로 1조8천억 달러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먼저 들어가서 조금 만들어 주면 우리 부담을 좀 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핵입니다. 따라서 핵문제가 기업인들은 자꾸 분리하자고 소리하는 데 분리할 수는 없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기업인들이 북쪽에 가서 요거요거는 좀 고쳐다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겠다. 열대여섯개 나온 규정, 법령가지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좀 고쳐다오. 즉 북쪽에 체제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말을 좀 해주면 오히려 정부

가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개의 정부가 하나로 되는게 통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전과정을 통일의 과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 시원하죠. 조금 나아지는 것이 통일에 접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過程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을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단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단순한 해답이 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분명하게 확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주어진 현실은 그러한 확답이 나올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하신 분, 토론해주신 네 분 선생님, 끝까지 경청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학술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附錄〉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 會 辭：李秉龍(民族統一研究院 院長)
- 14:05~14:45 主題發表
 - 司 會：安秉俊(延世大 教授)
 - 發 表：金炳魯(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金正日 政權의 出帆과 對內外 政策展望”
朴鍾喆(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우리의 對北政策
- 14:45~15:00 Coffee Break
- 15:00~17:00 討 論：梁性喆(慶熙大 教授)
康仁德(極東問題研究所 所長)
徐時柱(聯合通信 地方副局長)
都俊鎬(朝鮮日報 北韓部長)
- 17:00~18:00 다 과 회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の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북한이 대남동향 분석(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세미나시리즈 94-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0月 日

發行日 1994年 10月 日
